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석두



귀농귀가가 늘고 있다. 지난 1998년 6천409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던 귀농귀가는 99년 4천118가구에서 2000년 354가구로 급감하였다가 2001~2003년 연평균 700~800가구의 정체를 거쳐 2004년 1천302가구로 급증한 이후 2005년 1천240가구, 2006년 1천754가구, 2007년 2천384가구로 늘었다(3년간 연평균 증가율 30%). 2007년 도별 귀농귀가 수는 경북이 772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475가구, 경남 277가구, 전남 257가구 등의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2008년에 귀농귀가는 300명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까지만 해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농업 일자리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 1998년에도 1997년에 비해 광공업 취업자는 63만명(13.7%)이 줄고 3차산업 취업자는 76만명(5.3%)이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귀농의 성공을 위하여

11만2천명(4.9%)이 증가하였다. 둘째는 전원생활 희망자의 증가이다.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신규 귀농자 410명 중 23.2%가 '퇴직 후 여생을 농촌에서 살기 위하여' 귀농하였으며, 18.5%가 '농촌생활을 동경해서', 14.6%가 '영농 승계를 위해', 13.2%가 '건강을 위해', 9.8%가 '사업실패·실직 때문에', 5.6%는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귀농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은퇴 후 이주를 포함하여 농촌생활이 좋아서 귀농한 비율이 47.3%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귀농자금은 평균 7천400만원의 소액으로, 농지구입(46.1%)과 주택구입(41.3%)에 대부분을 지출하였으며, 절반 이상(50.2%)이 취미·여가(49.8%)가 아니라 농업수익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8%만이 귀농을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는 반면 대부분이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에 대한 지원책이다. 전북 진안군은 97년 이래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설치하여 귀농상담을 실시해왔으며, 2007년부터 귀농을 간사제도, 귀농학교 개설, 귀농자 멘토링, 전문가컨설팅, 주민초청 및 귀농인 만남 행사, 안내책자 발간 등 귀농지원 종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이어 2007년 5월 강진군이 '귀농지원센터'를 제정할 것을 필두로 2008년 말까지 18개 시군이 뒤를 이었다. 이들 시·군의 지원 내용은 각기 차이가 있으나 종합하면 대부분이 빈집·주택수리비(300~500만

원)와 영농교육비를 보조하며, 귀농자에 대한 후견인 또는 멘토링제도를 운용한다. 또한 귀농정착금으로 강진군은 3천만 원까지 보조, 해남군은 1억원까지 융자하며, 청송군은 400만원을 보조한다. 이외에 농지구입자금 융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이자와 취득세·등록세 지원 등도 있다. 도에서도 귀농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빈집수리비 300만원, 교육실습비 30만원씩 8개월, 귀농학교수강료 30만원 등을 지원하며 정착자금으로 1억원까지 융자한다. 경북도는 귀농정착자금을 가구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귀농은 농촌에 활력을 주고, 실직 도시민에 일자리와 삶을 제공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귀농자도 지자체도 준비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귀농자가 격감하고 탈농자가 증가하였다.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귀농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농업·농촌이야말로 경기불황의 충격을 흡수·완화하는 완충제이며,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 소외·영남 편중 인사 해도 너무 한다

이명박 정부의 편중 인사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부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주요 공공기관장·감사 322명 가운데 142명(45%)이 영남 출신이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의 영남출신은 43%였다. 현 정부의 영남편중 인사가 얼마나 심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사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 심각하다.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제청 차장(청장 승진 유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과 사정기관 라인인 100% 영남 출신이다. 24개 금융 공공기관장 가운데 영남 출신이 16명(66.7%)이나 된다. 거의 항우회 수준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 같은 무지막한 편중인사는 없었다.

반면 호남인사는 거의 씨가 마를 정도다. 주요 인사 322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44명(13.9%)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요 부처나 힘있는 기관장은 가뭄에 콩 나듯 하다. 특히 청와대 인사라인에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소외·영남편중 인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42.1%인 영남 출신이 2월 현재 2.9%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호남 출신은 15.4%보다 1.5%포인트 줄었다. 호남 인사를 들여내고 영남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지역편중 인사는 소용이나 타협보다 보다는 분열과 대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역·학연으로 엮인 인사들이 핵심 권력기관을 장악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이 믿고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끼리끼리 인사'로는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경제 위기 극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철학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인사를 해서야 되겠는가. 균형 인사만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해결책이냐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부부터 나서라

올해 상반기에 금융회사와 공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거나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인력동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국전력은 작년 상반기 184명을 채용했으나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상반기 채용계획이 전혀 없다.

공기업 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무원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25% 줄일 모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은 올해 약 2만3천793명으로 지난해의 3만1천865명보다 8천여명(25%) 줄어든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도 작년 9천300명에서 올해 4천2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가뜰이나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비호가

일 수 없다. 그런데 공기업들의 인력감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경영효율화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카드이지만 공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공기업은 나라에서 직접 도움을 줘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사들이다. 실업율을 낮추기위해 기업들에게는 고용유지를 독려하면서 정작 공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나서서 인력을 줄이는 관에 어느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겠는가.

오히려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투자, 고용 창출을 통해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여야 한다. 미국 정부가 신유일 정책을 통해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할 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최인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의 성패는 주로 노력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운(運)에 달려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운 좋게 어떤 일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다.

올바른 삶일까? 한미FTA 체결이 수출기업과 농민에게 가져다주는 득실이 다르고,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 반영을 폐지하는 것이 외교생과 지방 일반고생에게 주는 득실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재능보다는 운수적(運數的) 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학을 거쳐 사회생활 15년차인 필자 역시, 여러차례 '운칠기삼'을 경험하였다. 그 첫째를 꼽으라면, 첫 대학입시에서 합격생과 같은 점수를 받고도 동점자 처리기준에 밀려 낙방한 일이다. 당시의

이처럼 입시제도든, 사회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간에, 내게 행운을 가져다준 그 제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누군가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을 것이므로, 어찌 보면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이미 빛을 진 것인지도 모른다. 법의 세계에 들어와 15년째 재판장을 하면서도 이 질문 앞에 서면 늘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법의 목적은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데 있고, 정의는 가장 쉽게는 '각자에게 그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불안정한 사회제도 때문에 누구는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당했다면,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기 위해 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서울대 법대 동점자 처리기준은 '연소자 우선'이 원칙이어서 초등학교를 7살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8살에 입학한 필자는 낙방하였다. 지금 사법부내 법관의 서열이 이와는 정반대인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보더라도, '나이의 많고 적음'은 운수적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해 갖은 사정을 호소하면서 구속을 면하고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권력자와 재벌이 있는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안돼서 자신의 딱한 사정조차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민초(民草)도 넘쳐난다.

지금도 수능과목의 변경이나 배점비율의 변경만으로도 합격의 당락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생각해 보면, 인간사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 사이에서 공정한 귀를 갖고 민초의 가슴속 목소리까지 들으며 엄정하게 재판하지 않는다면, 나는 법의 이름으로 불의(不義)에 동조하는 자가 돼버리지 않을지 두렵다.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강한 자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한 찬송가 구절처럼,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하는 것이 정의(正義)의 명령이 아닐까?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기고

박창규



전남의 관광이 변하고 있다. 과거 멀게만 느껴지고 속박, 놀거리가 부족했던 관광 낙후지에서 이제는 관광기반이 갖추어진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녹색을 통한 문화관광기반을 이미 천천히 다져오고 있으면서 보성녹차, 대숲이 각광을 받던 최근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에서 슬로시티, 문화체험상품을 찾는 외국인들에서 우리 전남관광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순겨진 곳을 소개하고 직접 답사함으로써 국내여행문화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지 않은 전남 관광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청정녹차 녹색자연환경에 기인하기는 하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동안의 꾸준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국내여행동향조사(한국관광공사 발표)에서 '2009년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전남이 전국 3위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비효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남도를 선호한

이제 국내관광의 주요 목적여행지로 자리를 잡아지면서 전남 관광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하나씩 예전에 비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전남의 관광산업이 향후 '전남의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전락산업으로 중요하게

전남 녹색 관광의 힘

주 연령대층은 60대 27%, 40~50대 25%, 20대와 30대가 각각 24%를 차지하는 등 전 연령대 층이 고르게 선호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부산, 경북이 1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전남관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잠재관광객의 관광 트렌드에 잘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되고 있다. 정부 관광정책의 방향도 '저탄소 녹색성장실현을 위한 녹색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슬로시티·황포돛대 등의 남도만의 Only-one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는 저탄소 녹색관광시범개발단지로 지정되어 녹색의 땅, 전남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통해 다양하게 펼쳐진 지역관광 이벤트와 홍보 전략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한 최대의 성과는 지역관광 이미지의 구축으로 국내적으로 광주·전남 구석구석의 관광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 구축을 새롭게 부여한 사례로서 '구석구석 여행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남도투어센터, 국내여행상품 공모전, 시티투어 등을 통하여 전남 구석구석의

이제 '변화하는 관광객의 행태에 부응하는 관광개발과 관광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경쟁적인 특화관광시설 및 대형관광단지 개발과 달리 차별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적절히 진행할 수 있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관광 현안 과제에 현명한 방향 설정과 전략수립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라 할 시점이다. <전남도립대학 호텔관광레저과 교수>

워킹맘 위해 직장내 모유수유실 설치 해라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다가 다시 분유로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맘이 아픈 일인지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분유를 뱉어내는 아이에게 모질게 젓병 물리는 훈련을 시켜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아이가 배고픔에 울며 보채는 것까지 지켜 보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모유 좋은거야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석달 동안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얼마전 복직하면서, 모유수유를 스스로 포기했다.

애기 하지는 않았지만 모유수유한다고 유난 떠나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느껴져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했다. 대부분 직장에서는 화장실이나 회의실 한 구석에 숨어서 젓을 짜야 하는데 솔직히 사랑하는 아기에겐 먹일 젓을 화장실에서 짜야 하는 현실은 기분부터 불쾌하다.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 캠페인이라도 벌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저출산 시대에 여성이 사회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더 이상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번 30~40분씩 자리를 비우기가 눈치 보여 자주 유출을 못했더니 젓이 말라 버렸다. 특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대놓고

말하곤 했다. <황은숙·광주시 남구 구동>

無等鼓

지난 16일 공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사상 최초로 지역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다 전북 일과 대구, 충남 등 곳곳에서 성적 조작과 징계과정의 오류가 속속 확인되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없다'고 자신해왔던 광주·전남 지역 교육청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번 배경에서다. 일부 지역에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장·교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성적경쟁을 유발하고, 평가 자체를 더욱 왜곡

다분하다. 교육 경쟁력과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들의 열정과 정성을 기입하는 '재래식' 방식을 사용해도, 서술·단답형 문항이 20%나 돼 채점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공산도 컸다. 이처럼 부실한 평가관리 시스템 속에서 나온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는 덜

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번 배경에서다. 일부 지역에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장·교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성적경쟁을 유발하고, 평가 자체를 더욱 왜곡



터무니 없는 대학 입학금...사용내역 공개해야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이 너무 비싼 느낌을 준다. 국립대는 20만원 안팎인데 비해 사립대학들은 70만~100만원을 받는데 과연 사립대학들이 이토록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하다. 엄연히 수업료나 기성회비가 별도로 징수되는 데 굳이 신입생한테 입학금을 부과하는 것은 나쁘게 표현해서 입학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도 고마운 일일텐데 입학금을 빌미로 소액도 아니고 거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꼭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그렇게 받았다면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어느 대학도 입학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힌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입학금의 용도 및 한도액을 정해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명분없는 입학금을 못 받게 강력히 통제했으면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업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처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